

“하루 맡기려고 2주 대기”…아이돌봄 서비스 불만 높다

광주 부모들 대기시간 길어…당근마켓·SNS에 육아도우미 구인 글 봇물
인력 부족 속 틈새 돌봄시장 날로 커져…“긴급돌봄센터도 무용지물” 호소

광주 지역 부모들이 ‘육아도우미’에게 하루 몇 시간 자녀를 맡기려면 무려 12일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하늘의 별따기’ 수준으로 어렵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당근마켓과 SNS를 중심으로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를 ‘알바’ 형태로 구하는 구인글이 쏟아지면서 ‘틈새 돌봄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신규 이용자 기준 광주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평균 대기 시간이 12일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도 돌봄 인력 부족으로 대기하고 있는 가구 수만 47곳에 달했다. 동구 4가구, 서구 8가구, 남구 11가구, 북구 14가구, 광산구 10가구 등이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광주시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와 5개 구 서비스 제공기관(동구 아이돌봄지원센터, 서구 가족센터, 사단법인 그루터기, 북구 가족센터, 광산구 사단법인 광주미아코니아)에서 맞벌이 가정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봐 주는 서비스다.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감면된 가격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본 가격은

기본형의 경우 시간당 1만2790원, 가사활동을 포함한 종합형의 경우 1만6620원 수준이다.

해당 서비스는 고질적인 돌보미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2755가구(아동 4240명)에 달하지만, 돌보미 수는 1297명에 불과했다.

부모들은 맞벌이 가구 증가와 최근 시간이 불규칙한 비정형 노동이 확산하고, 아이 연령, 돌봄 시간대, 야간·단시간 수요 등 변수가 많아지면서 공공 아이돌봄이 수요를 모두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수요가 많은 아침·저녁 시간대, 야간 시간대 돌봄 서비스를 받으려면 대기 시간이 하염없이 늘어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야간 긴급 보육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한 긴급 아이돌봄센터도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긴급하게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한 경우 14일 전부터 당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보육교사 4명이서 2교대로 운영하고 있는데다 물리적인 공간 한계로 하루에 10명씩밖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 지역에서 아이 돌을 키우고 있는 A(38)씨는 “아이가 언제 아플지, 언제 긴급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데 일주일씩 대기하며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라는 것이 앞뒤가 맞는 소리나”고 하소연 했다.



최근 광주시 북구청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광주 지역 한 맘카페에도 최근 “지자체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으려면 신청 후 한 달을 기다려야 돌봄 선생님이 매칭되고, 신청일 기준 두 달이 지나서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모들은 당근마켓과 SNS 등에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를 알아 형태로 구하는 글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최근 광주시 SNS와 당근마켓 등에 올라온 구인

글에는 아이 하원, 등원 등행, 숙제·놀이지도, 신생아 돌봄, 사진 촬영 후 전송, 장시간 단독 돌봄, 긴급 상황 책임 대응 등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당근마켓에는 최근 일주일간 육아도우미 구인 글이 약 7건이 확인됐으며 맘카페 등 지역 기반 플랫폼을 합치면 월 20건 이상은 꾸준히 게시되고 있었다.

일부 구인 글에는 CCTV 설치 동의, 휴대폰·TV

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 등분·보증·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자격증이 없어도 육아 경험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되는 사례도 다수였다.

만약 이 경우 돌봄 관련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들이 무분별하게 고용되고 있고,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 합의로 일하는 경우도 많아 노동·고용 보호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지원 사업의 돌보미는 보육교사·유치원 정교사,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자격증을 갖추거나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알바 형태로 고용되는 이들은 이같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결국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돌봄 노동자와 보호자, 아동까지 모두 법적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영아 돌봄 치침과 보호자·돌봄 인력 대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은경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퇴근 시간, 애교, 아이 연령 등 맞벌이로 부모의 스케줄 관련 변수가 많은 현실에서 공공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 간 육아도우미 계약이 늘어나는 것도 수요와 공급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아침·저녁 몰리는 시간대 임금을 높이거나 아간 이용 시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 보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12개월 아하영아 돌봄 수요가 높아 이를 담당할 인력과 지침이 충분히 마련되는 등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공공재산 부실 관리’ 전남농기원·강진군 ‘뒷북 대응’

‘해금’ 상표권 혼란 농기원

무효심판 청구 절차 접수

이중계약·되사기 논란 강진군

업체에 내용증명 등 행정조치

공공재산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지적(광주일보 1월 8일 6면)과 관련, 전남도농업기술원과 강진군이 뒤늦게 후속조치에 나섰다.

20일 전남농기원에 따르면 농기원은 지난 19일 지식재산처에 해당 상표권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 절차를 접수했다.

전남농기원은 자체 개발한 키워 품종 ‘해금’의 상표권을 소홀하게 관리하다 민간 영농법인에 빼앗겨 해당 상품명에 품종을 기재해 판매·유통하려 한 농민과 유통업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또 농기원은 농민과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신선한 키워’, ‘신선한 키위프루트’, ‘신선한 키위 도매업·소매업’, ‘신선한 키위 온라인 판매대행업’ 등에 대해서도 해당 민간 영농법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리사 자문 내용을 전달하며 뒤늦게 안내하고 나섰다.

농기원은 “법적 자문을 통해 농민과 유통업체 등의 ‘해금’ 명칭 사용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회신받았다”면서 “‘해금’은 품종명으로 상표가 아닌 사실·속성 표시로 볼 수 있으며, 상표법 제99조에 따라 상표 등록 이전부터 명칭을 사용해온 이들의 경우에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남농기원 관계자는 “농민들이 ‘해금’ 명칭을 사용했을 때 범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승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농업인 누구나 ‘해금’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파크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 부지 매매 및 공공재 되사기 비판을 받았던 강진군도 내용증명 등 행정조치에 들입했다.

강진군은 지난 13일 파크골프장 사업을 위해 지난해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한 A 업체에 ‘베이스볼파크 부지에 대한 거래분 해소 및 계약 이행 촉구’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내용증명에는 “제3자의 권리주장으로 소유권이 전 의무 이행이 불확실해졌다”며 오는 2월까지 지급하기로 돼있던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 거절의사를 통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부지는 도암면 학장리 일대에 있으며, 현

재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인용한 ‘부동산 처분금지 거래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군과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기 전, A 업체가 이미 다른 이에게 부지를 매매한 적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결국 소유권 관련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물리적인 소유권 이전이나 공사 착공이 불가능한 상태다.

강진군은 해당 부지를 거쳐 주도적으로 민간에 헐값에 넘긴 땅을 이제 와서 수십 배의 웃돈을 주고 되샀다는 점에서 ‘헬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군은 지난 2007년 ‘베이스볼 파크’를 조성할 당시 해수부로부터 국유지 신규 등록 절차를 이끌어내 민간 연체 B사에 4억 원(보상비 포함)에 매각되도록 주도했다가, 최근 이 부지를 파크골프장 부지로 쓰겠다며 62억 원에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2배인 1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며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최대한 취하겠다. 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는 즉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윤준영 기자 yoon@kwangju.co.kr

‘내란 방조’ 한덕수 오늘 1심 선고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해 11월 26일 한 전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켰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 피해를 해아릴 수 없다”며 한 전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한 전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도록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할 목적으로 사후 계엄 선포문에서 명하고 이를 폐기할 것을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만취 순천시 간부급 공무원, 택시기사 폭행·차량 탈취

순천시 간부급 공무원이 음주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차량을 빼앗아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순천경찰은 순천시 소속 A과장(5급)을 강도·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과장은 이날 새벽 0시 10분께 순천시 조곡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를 위해 택시에 탑승한 뒤, 60대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하고 차량을 탈취한 혐의

를 받고 있다.

당시 A과장은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있다 택시가

잠시 정차한 상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과 발을 이용해 B씨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가 차량 밖으로 몸을 피하자, A과장은 허리에 걸친 차량을 몰고 가족 동의 한 아파트 단지까지 2~3km를 운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멈춰선 차량에서 A과장과장을 긴급 체포했다.

/서민경 기자 minky@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텀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